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선동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 10. 12(금)	담당자	강태용 비서관 (010-4925-4509)
문 의	784-8971~3		박필동 보좌관

기업정보 취급 금감원 임직원 5명 중 1명 주식투자 규정 위반

- 주식거래 조사 대상 161명 중 35명(21.7%) 위법 사항 발견 인사 조치
- 비위행위 대책 노사 미합의로 시행도 못하고, 올해 주식보유자는 오히려 증가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 투자상품 보유매매 관련 내부통제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 있는 임직원 161명 중 35명(21.7%)이 주식투자 규정 위반으로 검찰 조사 및 징계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9월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총 5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하여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였고, 2018년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 2명을 포함한 임직원 5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완료단계에 있다.
 - 문제는 징계혐의 대부분이 업무와 무관한 주식매매 위법과 채용비리와 관련된 범죄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 특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규정위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인사조치가 완료된 인원만 19명이고 검찰·법원조치와 금감원 자체조사 이후 징계가 예정된 인원도 16명으로 주식투자 규정위반으로만 35명이나 처벌받았는데, 금융시장의 심판역할을 하고 있는 금감원이 선수로 나서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 처벌인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조사 대상 인원이 금감원 전체 직원 1,942명 (2017년 조사기준)이 아닌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161명이라는 점이다.
- 161명도 전체 조사대상이 아니라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동의한 138명만 조사를 실시하였고, 23명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하자 이후 검찰과 금감원 자체 조사 실시로 법규 위반 사항이 밝혀진 것이다.
- 다시 말해 기업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 161명 중 35명(21.7%)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 인사 조치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 또한, 국세청 자료 활용을 통한 금감원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취득 자료를 조사한 결과 내규를 위반하여 취득한 사람도 32명이나 추가로 파악되어 인사조치를 받았다.

<표 1> 기업정보 취급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관련 인사조치 현황

조사대상	조사 인원	처벌 및 인사조치	인원	비 고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 수행 임직원 중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자	138명	검찰 및 법원조치	2명	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② 벌금 2,500만원(2심 진행중), 과태료부과 ※ 검찰·법원 조치 이후 징계절차 개시 예정
		주의	10명	징계위원회 개최
		경고	5명	징계위원회 미개최
		소계	17명	
감사원 정보제공 미동의자	23명	검찰 및 금감원 자체 조사 비위 혐의자	18명	
		검찰 조사	3명	※ 검찰·법원 조치 이후 징계절차 개시 예정
		징계 조치	2명	감봉 1명, 견책 1명
		징계 예정	13명	
합 계	161명	인사조치인원	35명	비율 : 21.7%

자료 : 금융감독원

- * 국세청 자료 활용을 통한 금감원 전체 직원 비상장주식 취득 조사 결과 내규 위반자 : 32명
- 주의촉구 1명, 징계위원회 미개최 서면 경고 조치 30명, 징계예정 1명

-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면 일벌백계 조치를 통해 문제의 근원을 도려내야 하는데, 규정위반자에 대한 중징계는 감봉 1명에 불과하였고, 경징계 견책 1명, 주의촉구 10명,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감사실의 서면경고 처리로 끝난 사안도 5명이나 있었다.
- 특히, 비상장주식 취득 내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30명에 대해서 단순 서면경고만 하기도 하였다.
- 향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징계절차가 논의되겠으나, 지금과 같은 관행을 고려해 볼 때, ‘팔이 안으로 굽는 처분’이 예상된다.
- 감사원 감사이후 금감원은 조직 쇄신을 위해 2017년 11월 9일에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임직원의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으로 ①금융사 주식 취득금지, ②일부 부서 소종목 취득금지, ③주식 취득시 6개월 이상 의무보유, ④징계기준 마련, ⑤감찰실의 주기적 점검 등을 내어 놓았다.
- 그러나, 근절방안 발표이후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지만, 노사합의가 되지 않아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체 금감원 임직원 주식보유자수는 2017년 464명에서 469명으로, 주식보유총액도 131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 총 거래금액도 2018년 1분기 65억원으로, 2017년 총 193억원, 분기 평균 48억원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선동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주식투자, 채용비리 문제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데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금감원의 상황인식이 안일하다”며, “진정한 조직 쇄신을 이루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1] 금융감독원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 신고현황('13년~'18.3월)

(단위: 명, 백만원)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이하	계
2013년	보유자수	2	9	61	146	144	51	413
	보유총액	24	294	3,014	4,671	2,684	544	11,231
2014년	보유자수	2	10	69	142	151	47	421
	보유총액	102	613	2,741	4,390	2,790	769	11,405
2015년	보유자수	2	14	74	146	159	63	458
	보유총액	152	764	2,587	4,288	3,034	1,006	11,831
2016년	보유자수	1	18	72	145	159	60	455
	보유총액	150	939	2,416	4,744	2,752	1,318	12,319
2017년	보유자수	0	16	83	149	164	52	464
	보유총액	0	592	3,025	4,609	3,512	1,326	13,064
2018.1/4분기	보유자수	0	16	88	153	150	62	469
	보유총액	0	571	3,027	4,881	3,282	1,570	13,331

자료 : 금융감독원

1) 보유자수, 보유총액은 연도말 기준 및 2018.3월말 기준

2) 금융투자상품 : 주식, 증권예탁증권(DR), 주식연계채권(CB,BW 등),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참고 2] 금융감독원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신고현황('13년~'18.3월)

(단위: 회, 백만원)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이하	계
2013년	거래횟수	0	13	254	284	367	306	1,224
	거래금액	0	359	2,886	3,456	4,300	1,144	12,145
2014년	거래횟수	2	26	303	400	412	237	1,380
	거래금액	100	266	3,843	4,262	3,706	1,226	13,403
2015년	거래횟수	1	21	440	622	831	337	2,252
	거래금액	50	109	4,968	7,257	6,614	1,499	20,497
2016년	거래횟수	2	41	342	453	532	310	1,680
	거래금액	10	478	4,361	5,043	3,533	1,904	15,329
2017년	거래횟수	9	55	376	576	664	379	2,059
	거래금액	271	398	4,755	6,524	4,987	2,332	19,267
2018.1/4분기	거래횟수	0	8	108	108	131	144	499
	거래금액	0	23	1,643	2,039	1,881	935	6,521

자료 : 금융감독원

1) 금융투자상품 : 주식, 증권예탁증권(DR), 주식연계채권(CB,BW 등),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2) 거래횟수 및 거래금액은 매수 및 매도 거래를 합산하여 산출